

<2023 소방간부 행정학 문제 및 해설>

01. (가)~(다)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옳은 것은?

- (가)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나)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이동시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 (다)

- ① 전직 전보 전입
 ② 전직 전입 전보
 ③ 전보 전입 전직
 ④ 전보 전직 전입
 ⑤ 전입 전직 전보

<해설>

(가)는 전보, (나)는 전입, (다)는 전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답: ③

02. 다음의 역사적 배경하에 등장하게 된 행정이론이 아닌 것은?

- 1930년대의 뉴딜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료의 재량권도 증가하게 되었다.
- 행정부의 정책 입안 기능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 ① 정책과학
 ② 신행정학
 ③ 공공선택론
 ④ 발전행정론
 ⑤ 비교행정론

<해설>

뉴딜정책의 시행으로 팽창된 미국의 연방관료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연방정부의 역할과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 시기를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1950~1960년대)라고 합니다. 1950년대 행태주의,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이, 1960년대 관리과학, 정책연구, 신행정학이 등장했습니다.

③ (X)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재정 압박과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부실패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난과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이념에 기초한 감축관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행정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당시 오스트롬은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답: ③

03.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 ㄱ. 신제도주의 학파는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토대로 제도 변화의 동태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 ㄴ.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보다 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 ㄷ. 뉴거버넌스는 참여와 네트워크보다는 시장 중심의 가격이나 경쟁에 기초한 조정방식을 강조한다.
- ㄹ. 뉴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중간조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결과가 개인의 선호체계의 직선적인 연장선상에 있다고 가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해설>

- ㄱ. (O) 거래비용이론은 신제도주의 학파 중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해당합니다.
- ㄴ. (O) 구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만을 인정하였으나,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합니다.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보다 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 ㄷ. ㄹ. (X) 뉴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참여와 네트워크에 기초한 조정방식을 강조합니다.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보다 개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 ㅁ. (X) 신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되 선호의 행사와 표출에 있어 제도적 제약요인이 작용하여 합리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개인의 행위결과가 개인의 선호체계의 직선적인 연장선 X).

답: ①

04.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총괄평가 이후에 이루어진다.
- ② 정책과정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 중 하나이다.
- ③ 정책평가연구는 순수연구라기보다는 응용연구라고 할 수 있다.
- ④ 정책영향(policy impact)은 정책산출(policy output)이나 정책성과(policy outcome) 이후에 나타난다.
- ⑤ 기준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등으로 나뉜다.

<해설>

- ① (X)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입니다. 평가성 사정은 평가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 ② (O) 정책평가는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 또는 정책 성과와 정책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책평가 결과는 새로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되어 정책과정에 환류될 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의 책임성 규명,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의 축적에도 활용된다.
- ④ (O) 정책영향이란 그 사업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된 효과(쌀의 증산으로 인한 쌀값이 하락이나 재배면적의 변동, 부작용, 기타 외부효과 등)를 의미하며, 정책산출이나 정책효과보다도 더 장기간 후에 나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 ①

05.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권성, 유연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 ② 전문성에 따른 수평적 분화는 높지만 수직적 분화는 낮다.
- ③ 표준화된 규정이나 규칙이 적어 공식화 수준이 낮다.
- ④ 매트릭스 구조, 태스크 포스, 사업부제 구조 등이 여기에 속하는 조직형태이다.
- ⑤ 계층화 수준이 낮은 탈관료제 조직이어서 복잡성의 수준도 낮다.

<해설>

- ②, ⑤ (O) 애드호크라시는 낮은 수준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애드호크라시는 기본적으로 전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에 따른 수평적 분화 정도는 아주 높지만, 관료제와는 반대로 수직적 분화는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 ④ (X) 매트릭스 구조, 태스크 포스 등이 애드호크라시에 속하는 조직으로 인정됩니다(사업부제 구조 X).

답: ④

06.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예산의 배정에는 정기배정, 수시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감액배정 등이 있다.
-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ㄷ.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ㄹ. 세출예산의 재배정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 ㄱ. (O) 예산 배정의 유형에는 정기배정, 수시배정, 긴급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감액배정, 배정유보 등이 있습니다.
- ㄴ. (X)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반기별 X, 국회의 심의 X).
- ㄷ. (O) 「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
- ㄹ. (O) 「국가재정법」 제43조의2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답: ④

07.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인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는 사무의 위임·위탁,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에 대한 임면, 선결처분 등이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설>

- ① (X)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인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O) 「지방자치법」 제105조
- ③ (O) 「지방자치법」 제125조
- ⑤ (O)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답: ①

08.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응적(responsive) 책임은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도의적(responsible) 책임은 정부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지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한 차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 ③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관료들이 책임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요소보다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④ 내적 책임은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이 상급기관이나 상관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하며, 외적 책임은 입법·사법·국민 등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한다.
- ⑤ 파이너(Finer)는 관료들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약화되면 권력을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사법·입법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 ② (O) 도의적 책임은 국민의 수임자 또는 공복으로서의 광범위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 ③ (X) 프리드리히는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나 책임감에 기초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심리적 요소보다 제도적 장치 X).

답: ③

09.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행태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 ② 정책순응에 수반하는 부담으로 인한 불응의 대책으로는 보상이 효과적이다.
- ③ 정책집행자나 집행을 위임받은 중간매개집단은 정책순응의 주체가 아니다.
- ④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은 규제정책보다 배분정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 ⑤ 정책집행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완전하게 순응하면 정책결정자의 원래 의도가 보장된다.

<해설>

- ① (X) 순응이란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 및 지침과 일치하는 정책집행과정의 참여자, 즉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를 의미합니다(행태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X).
- ② (O)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의 목표와 그 달성수단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도, 정책에 순응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할 희생 또는 부담이 크면 불응하게 됩니다. 경제적 비용에 기인하는 불응의 대책으로는 순응에 대한 유인이 필요합니다. 즉 순응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과 같은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 ③ (X)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일선집행담당자와 중간매개집단의 순응도 중요합니다. 중간매개집단이란 공공정책의 집행을 돕기 위하여 공식정책집행자로부터 집행의 책임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일선관료들의 순응이 없으면 서비스 제공이나 규제활동 자체가 왜곡되거나 또는 집행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 ④ (X) 배분정책과 같이 서비스나 재화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순응주체인 경우는 정책내용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정책의 경우보다 순응이 쉽습니다.
- ⑤ (X) 정책집행에 있어서 참여자의 순응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입니다.

답: ②

10.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분절시킨다.
 - ②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③ 정부의 전체적인 통제기능을 약화시켜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④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으로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 ⑤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운영에서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해설>

- ①, ②, ③, ⑤ (X) 조직구조의 분절화, 규제완화, 분권화 등은 신공공관리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④ (O) 탈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답: ④

11.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
 -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은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며,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 ③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대상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소위 갈라먹기 다툼(pork barrel)을 특징으로 한다.
 - ④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의 대표적인 예로는 징병, 과세, 토지수용 등이 있다.
 - ⑤ 최초의 분류 때 구성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설>

- ④ (X) 징병, 과세, 토지수용 등은 추출정책의 사례입니다.
- ⑤ (O) 일부 정책들은 Lowi가 분류한 배분, 규제, 재분배정책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197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구성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답: ④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은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④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할 수 있다.

<해설>

- ③ (X)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⑤ (O)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답: ③

13.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의 권력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거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인 권력체계 내에서만 발생한다.
- ②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누구나 가질 수 있다.
- ③ 합법적 권력은 권한(author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 내 직위와 직무에 기반을 둔다.
- ④ 강압적 권력은 다른 사람을 처벌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다.
- ⑤ 보상적 권력은 보상의 제공능력에 기반을 두는데,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해설>

- ① (X) 준거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준거적 권력은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답: ①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 그리고 책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④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사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한다.

<해설>

- ⑤ (X)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국가사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답: ⑤

15. 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체주의(synopticism)는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려고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를 중시한다.
- ②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예산결정이 전년도 대비 소폭의 증감에 그친다고 보고,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조절(mutual adjustment)을 중시한다.
- ③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budget theory)은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법적 기준 등 다양한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④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관료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주체로 가정하며,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 ⑤ 단절적 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예산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 변동에 따른 안정을 다루지 않는다.

<해설>

- ② (O) 점증주의 예산결정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예산과정과 흐름을 설명하고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 강조합니다.
- ③ (O) 다중합리성 모형에서는 예산실의 사정관이 예산 결정에 사회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등 여러 가지 합리성을 고려한다고 봅니다.
- ⑤ (X) 단절균형이론은 예산이 상당 기간 점증적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다가 다시 점증적 변화를 보인다는 주장을 합니다.

답: ⑤

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원(稅源)을 법률의 근거없이 독자적으로 발굴할 수 없다.
- ③ 보통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 ④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② (O)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목과 세율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⑤ (X)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답: ⑤

17.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의 수행 주체에 따라 직접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로 나뉜다.
- ② 관리규제는 과정이 아닌 수단과 성과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 ③ 경제규제의 예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물량규제 등이 있다.
- ④ 네거티브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포지티브규제보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⑤ 사회규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책임과 부담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② (X)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제는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 부여하며, 피규제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④ (O) 네거티브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고, 포지티브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답: ②

18. 다양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양성관리의 대상이 되는 다양성은 가시성과 변화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② 문화적 동화주의에 근거한 멜팅팟(melting pot) 접근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한 샐러드 보울(salad bowl) 접근이 있다.
- ③ 공무원 임용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인적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의 가치를 부정한다.
- ④ 고용평등정책(equal employment opportunity)은 소외집단의 공평한 임용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그동안 불평등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고용평등의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풀이의 핵심>

※ 다양성관리

- 1) 의미: 이질적인 조직구성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며, 보상과 함께 역량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체계적이고 계획된 노력을 의미
- 2) 다양성관리에 대한 접근방법
 - (1) 멜팅팟(melting pot) 접근: 문화적 동화와 문화적응을 포함 → 구성원 간의 이질성을 지배적인 주류에 의해 동화시키는 방법
 - (2) 샐러드볼(salad bowl) 접근: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 →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 (3) 멜팅팟 접근이 다양성으로 인한 조직응집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접근방법이라면, 샐러드볼 접근은 다양성을 통한 조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이해
- 3) 다양성의 유형화와 관리 전략
 - (1) 다양성관리와 관련해, 다양성의 속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가시성과 변화가능성의 두 가지 기준 적용
 - (2) 가시성: 구성원 간의 이질성이 얼마나 쉽게 확인될 수 있는가에 따른 기준
 - (3) 변화가능성: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이질성이 고정적인지 변화가능한 부분인지에 따른 기준
 - (4) 조직의 다양성 유형화 모형

		낮음	변화가능성	높음
가시성	높음	I 유형		II 유형
		성별		직업(사무직/생산직)
		장애(육체적)		직위/직급
		인종		숙련도(업무 수행 능력)
		민족		전문성
가시성	낮음	연령(세대)		언어(외국어 능력)
		III 유형		IV 유형
		고향(출신 지역), 출신 학교(전공)		교육 수준(학력)
		가족배경		노동지위(정규직/비정규직)
		성적 지향, 사회화 경험		자녀유무
가시성	낮음	성격, 종교, 동기요인		장애(정신적)
		혼인 여부		가치관

<해설>

- ① (O) 다양성관리와 관련해, 다양성의 속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가시성과 변화가능성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X) 개인별 맞춤형 관리, 대표관료제, 균형인사정책(다양한 인재가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일과 삶 균형정책(업무와 개인의 다양한 삶 조화)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입니다.
- ⑤ (O) 적극적 조치(차별철폐조치, affirmative action)란 과거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효과를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비혜택 집단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승진시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답: ③

1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③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징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해설>

- ① (X)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입니다.
- ③ (X)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아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④ (X)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 ⑤ (X)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답: ②

20.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익의 추구
- ② 민주적 의사결정
- ③ 평등한 가치 배분
-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

<해설>

공익, 평등, 형평, 자유는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고,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답: ②

21.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요인에는 성취, 인정, 책임감 등이 있다.
- ③ 브룸(Vroom)의 VIE이론은 유인가, 도구성, 기대치를 동기부여의 중요 구성요소로 본다.
- ④ 해크먼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은 직무수행자가 친교육구, 권력욕구, 성취욕구를 모두 충족할 때 동기유발이 된다고 본다.
- ⑤ 매슬로(Maslow)의 욕구계층제이론은 하위 욕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상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설>

- ① (O) 앨더퍼는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④ (X) 맥클랜드(McClelland)는 세 가지 욕구범주로 성취욕구(성취동기·책임감·도전정신), 권력욕구(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욕구), 친교욕구(친근한 관계)로 나누고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답: ④

22.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 ② 예외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
- ③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 ④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 ⑤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해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을 구성요소로 합니다. 예외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답: ②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구분된다.
- ② 공기업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고, 자산규모는 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금관리형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해설>

- ⑤ (X)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답: ⑤

24.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예산과 기금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의 공통점은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법률에 근거한 설치 등이다.
-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설치할 수 있다.
- ④ 기금운용계획(금융성 기금 제외) 중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범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 ⑤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한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해설>

- ① (O) 「국가재정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고 예산과 기금을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 ③ (X)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30% X)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답: ④

25.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 참여자에는 입법부,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 있다.
- ②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 등 제도적 권한인 공식적 자원과 국민의 지지 등 비공식적 자원을 갖는다.
- ④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형성에 대하여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형태로 대응하기도 한다.
- ⑤ 전문가, 학자, 관료 등이 의견교환을 하는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보다 느슨하게 연결된 집단이다.

<해설>

- ② (O)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 ⑤ (X)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지속적·안정적 관계이고, 이슈네트워크는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인 관계(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입니다. 이슈네트워크에 포함되는 행위자는 정책공동체와는 달리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답: ⑤